

- 충남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19. 2. 21.(목) 14:00
- 장 소 :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10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인 사 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충남도의원 이선영입니다.

충남의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습니다. 서구에서처럼 수백 년에 걸쳐 담금질되어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8.15광복 이후 도입되어 백여 년이 채 안 되는 이념입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뿌리내리는 동안 4.19혁명, 5.18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내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희생과 투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2016년에 시작된 촛불혁명으로 2017년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정부를 세우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나이나 성별, 직업, 지위에 따라 의견의 비중을 다르게 여기기도 하고 전체주의 방식으로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경향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건축물로 따지자면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하고, 우리안의 파시즘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바로 알고 생활화해야 합니다. 누구나 민주주의에 대한 막연한 이상은 있지만 생활 속에서 훈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흔히들 민주주의와 정치는 멀리 있다고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협업하여 과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웃과 반사회를 하고 동네에서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민주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강화되려면 무엇보다 이 생활민주주의와 생활정치가 자리매김 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토의하는 과정부터가 민주주의의 훈련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이 의견들이 모아져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1.

정의당 충남도의원 이 선 영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2. 21.(목) 14:00 ~ 16:00
- 장 소 :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10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충남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4:00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행자위 전문위원
14:05	14:10	5'	인사말씀, 내빈소개, 축사	이선영 위원
< 토 론 회 >				
※ 좌장 : 이선영 위원				
14:10	14:30	20'	주제 발표 ▶ 박성호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14:30	14:50	20'	▶ 서윤기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 하는가?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14:50	15:30	40'	지정 토론 ▶ 박진용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박수정 / 논산YWCA사무총장 ▶ 이필구 / 경기도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위원장 ▶ 황정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장	토론자 전체
15:30	15:45	15'	자유토론	발제자 및 토론자
15:45	15:55	10'	청중토론	참여자 전체
15:55	16:00	5'	정리 및 폐회	좌장(이선영 위원)

목 차

■ 주제발표

-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3
박성호(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 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 하는가? 13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서윤기(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지정토론

- ☞ 충남민주시민교육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25
박진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 시민사회의 조례제정 내용에 대하여 27
박수정(논산YWCA사무총장)
- ☞ 경기도 사례 기반 추진체계 구축에 관해 29
이필구(경기도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장)
- ☞ 전국적 민주시민교육 전망에 대하여 35
황정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장)

주제발표

-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3
박성호(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 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 하는가? 13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서윤기(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박 성 호

I.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 일상속 민주주의가 없다

2017년 12월, 에버트재단은 2017 에버트 인권상에 1천700만 촛불시민을 선정하였다. 에버트 인권상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초대대통령이었던 프리드리히 에버트(1871~1925)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에버트재단이 수여하는 국제적인 상이다. 인권상이 제정된 1994년 이후,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건 처음이라고 한다. 에버트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류가 만든 최상의 제도라고 믿었던 민주주의, 더 정확히는 대의민주주의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구호가 스페인의 <포데모스>라는 새로운 정치운동으로 나타나 국민들과 소통하며 스페인의 선거 때마다 승리를 이어갔다. 투명성,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기치를 들고 나온 이태리 정치운동이자 정당인 <오성운동>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 시작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을 무대로 펼쳐지는 <해적당>은 표현의 자유, 지적 재산권의 제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투명한 정부와 시민권 강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 정치운동들의 공통점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는 직접민주주의 정치실험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제도로서 정형화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계속 새로운 상상력이 시도될 때만이 계속 발전해갈 것이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은 정치적 주체로서 함께 학습하고 소통하는 민주주의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자료로 치밀하게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월호 시국선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재인 지지선언, 박원순 지지선언 명단에 오른 이들이 블랙리스트로 분류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는 ‘청와대가 지시(교육문화수석실)→국정원이 검증→문체부가 블랙리스트 하달→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이 점검→해외문화홍보원·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행’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국민일보, 2018.4.11.)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에서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일이 검찰 내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다. 서 검사가 추행 사건 이후 조직 안에서 겪었다고 폭로한 경험은,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 조직의 ‘인권 감수성’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줬다. 괴로워하는 그에게 동료 검사들은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 떠들면 그들은 너를 더욱 무능하고 이상한 검사로 만들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법무부에 알렸지만 ‘검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상사 평가나 잘 받으라’는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2018.1.29.)

지난 5월부터 4차례 이어진 대한항공 회장 일가 퇴진 촛불집회와 지난 주말 두 차례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에 따른 경영진 규탄 집회에서 직원들은 가면을 쓰고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를 고발했다. 정당한 주장을 하면서도 가면 속에 숨는 이들의 모습에서 **감시가 일상화된 항공사의 억압적인 조직 문화**와 노조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항공 노조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만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사측의 보복이 두렵다”고 입을 모았다. 가면을 쓴 것도 모자라 모자를 꼭 눌러 쓴 A씨는 “회사가 직원의 손톱 모양 또는 액세서리만 봐도 누구인지 알아낸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18.7.10.)

각자 삶으로 돌아가면 달랐다. “답이 없다” “이직·퇴직·이민” “운이 좋아야 한다”. 광장에서 자유발언을 위해 긴 줄을 서던 시민들이 일상에서는 “바른말 않고 사는 게 편하다”고 고백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은 그랬다. ‘연대하는 광장’에서 트인 말문은 고립과 경쟁의 개인으로 돌아가자 닫혔다. 삶의 요구를 함께 분출하고 해법을 모색할 **‘작은 광장’이 일상에는 없었다**. 배설과 냉소, 뒷담화, 독백만 남았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김모씨(32)는 “(정권은 무너뜨릴 수 있어도) 아버지·상사가 비민주·반민주라면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2017.1.2.)

1987년 이후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었으나, 국민은 4년 주기, 5년 주기의 주권자일 뿐이었다. 또한 촛불집회를 통해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긴 했지만,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바꾸는 것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군대식 상명하복, 가부장제적 남성주의, 연령에 의한 서열화, 학벌에 따른 차별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뿌리박혀 있다. 민주주의가 광장에만 있고, 일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촛불혁명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담아 국민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였다.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고,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서나 행사되며, 늘 행사되는’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국정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제도화를 포함시켰다.

[표 1]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구 분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의 성격	근대적 국민	주권자 국민
국민-국가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국민주권의 특성	대표되는 국민주권	개개인의 국민주권
권력의 성격	위임된 권력	생성적 권력
참여방식	제도화된 국민참여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
주권 실현방식	참정권, 투표권	국민제안, 국민숙의, 국민결정
역사적 사건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집회
사건의 의미	국민주권의 통로·제도 구축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 표출
민주주의 형태	제도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정치-시민 관계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
시민참여 기반	조직화된 시민사회 기반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출처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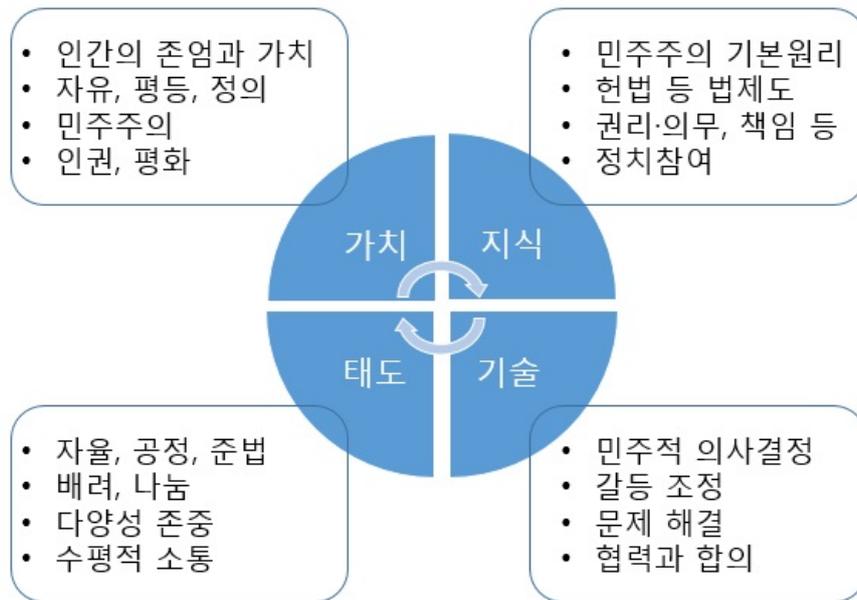
II.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등 제도·시스템으로서, 사회운영 원리와 각종 법률 등 사상·규범으로서, 삶의 방식과 태도 등 생활·문화로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 각각의 모습 하나하나도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모습을 갖춘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형화된 모습으로 남지 않고, 늘 완성을 향한 진행형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교육의 근본가치이자 내용, 그리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民主)’와 ‘공화(共和)’의 가치가 근간이 될 것이다. 전자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것, 후자는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공동의 뜻을 모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우리 사회가 다루는 방식 역시 민주적이어야 한다. 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 모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남인순 의원이 2016년 대표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201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 내용으로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 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가치에 관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요소들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요소

출처: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III.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흐름

우리 사회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40여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경찰들이 막대자로 여성들의 치마길을 재고, 남자들의 긴 머리를 단속하는 모습이 일상적이었다. 국가라는 공권력이 개인들의 삶을 결정짓던 사회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라고 규정할 수 없는 사회’였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성취한 제도적 민주화로 한국사회는 비로소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가가 시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던 시기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새로운 시대, 즉 시민사회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열린 공간에서 각 분야의 제도개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역별로 조직화되어 등장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토지공개념 입법, 부패방지법, 정치자금법 등 각종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에 앞장서 문제제기

자로서, 대변자로서, 대안제시자로서 한국사회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환경, 미디어, 인권, 주민자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교육을 전개함과 동시에 스스로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찾아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1990년 후반에 YMCA, 흥사단,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포럼>을 구성하여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교수 및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협의회>도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적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활동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15대 국회 이래 매 회기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현재는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 상태로 있으며, 최근에는 소병훈 의원, 이철희 의원 등도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이 사회적 공론화 부족, 추진 주체들간의 이견, 추진 동력의 미약 등으로 입법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포함됨으로써 다시 추진동력을 얻게 되었다. 국가적으로는 법 제정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전개되고 있다. 20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8개 광역자치단체와 18개 기초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었고, 7개 교육청에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었다. 앞으로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주민·학생들과 함께 실천적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표 2]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현황

(*2019년 1월31일 현재)

구분	자치단체(조례 제정연도)
광역자치단체 (8개)	서울(2014), 전북(2016), 경기(2017), 전남(2017), 세종(2018), 부산(2018), 대전(2019), 인천(2019)
기초자치단체 (18개)	서울시 강서구(2017), 광진구(2017), 노원구(2017), 도봉구(2017), 경기도 성남(2015), 광명(2017), 안양(2017), 용인(2017), 하남(2017), 의정부(2017), 고양(2018), 수원(2018), 파주(2018), 양주(2018), 남양주(2018), 경남 김해(2018), 울산시 울주군(2018), 충남 아산(2018)
교육청 (7개)	경기교육청(2016), 충북교육청(2016), 전북교육청(2016), 충남교육청(2017), 전남교육청(2017), 서울교육청(2018), 광주교육청(2018)

그리고 교육부는 2017년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교육과정정책관실 내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인권, 통일교육 등을 총괄시행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교육콘텐츠 개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제도화의 지원 역할을 부여받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전국 시민사회운동의 연대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연결과 협력을 위해 지역별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13개 광역네트워크(일부는 준비위원회)와 5개 전국조직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이어져, 향후 전국적인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IV. 민주시민교육의 추진방향

1.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제정

앞서 [표 1] 조례 제정 현황에서 보듯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조례 제정은 일차적 과제이다. 또한 조례 제정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학습장(場)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례에는 첫째, 헌법상 주권자로서의 시민에 대한 명시, 둘째, 교육시행에 있어 교화 및 주입 금지, 논쟁 재현 등 교육원칙의 준수, 셋째, 5년단위 종합계획의 의무화, 넷째, 정책 및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숙의·결정하는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다섯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표 3] 민주시민교육 조례 주요내용 비교

구분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종합계획	기간 명시없음	3년	5년	
거버넌스 위원회	명칭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임의규정	임의규정	의무규정
	기능	자문	자문	심의·의결
	의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기타사항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기타사항	종합계획, 정책·평가, 시민참여방안,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중간지원조직	없음	없음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2. 민주시민교육 추진체계(거버넌스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현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이다. 두 지역은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긴 하나,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두 지역 모두 자문기구로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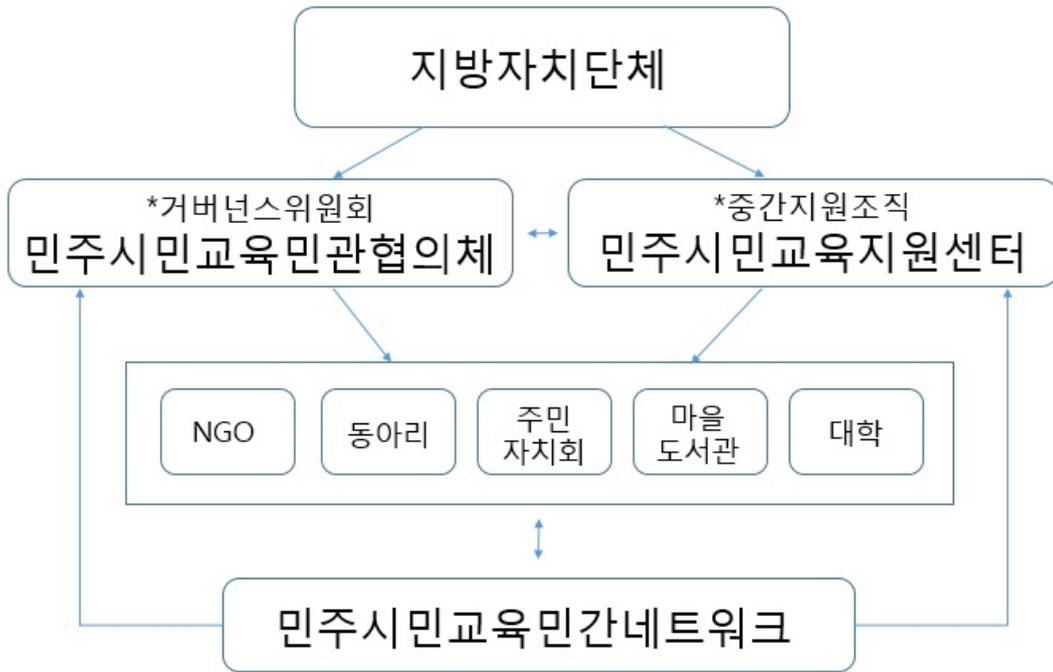
서울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 및 민주시민 학습조직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현장중심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2017년 4월에 설립·운영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활용을 통하여 민간위탁으로 진행하여 시민사회단체인 흥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민주주의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시민학습·사회참여모임(동아리) 지원사업, 민주시민교육 참가자·활동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 업무를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2018년 2월 진흥원 내에 경기도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주요사업으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모델개발 시범사업(주민리더교육, 주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지역공론장 지원사업, 시·군·계층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협의체 구성 지원사업,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표 4] 서울시·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조직 현황

지역	조례제정	중간지원조직	운영형태	인력	예산(2018년)
서울시	2014년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흥사단)	5명	6억2천만원
경기도	2017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	공공기관위탁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명	9억8천만원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현장에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네트워크가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운영 모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민주시민교육 추진 운영모델(안)

민주시민교육의 거버넌스기구로서 <민주시민교육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 전반에 관해 민·관·학의 주체들이 참여해 함께 숙의하고 심의한다. 협의체는 민·관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의회, 시민사회단체,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체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방향을 위해 5개년 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다루며, 사업별 논의와 실행협력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예 : 마을연계, 학교연계, 공공영역연계 등). 협의체는 학습자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효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전담추진기구(중간지원조직)로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의 의사결정 사항을 수행하고, 민·관·학의 주체들이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는 교육을 주도하고 직접 교육을 실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교육프로그램과 재정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노력하도록 한다. 자치단체 산하의 각 기관 및 읍면동, 그리고 민간의 여러 주체들의 연결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V. 민주시민교육의 중점 추진과제

향후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추진기반 구축 및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시민사회는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주체들의 연결을 돕고, 민·관·학 공동포럼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놓는 논의를 시작하도록 한다. 둘째,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여타 유관계획(마을민주주의, 평생교육 등)과 연계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구(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시민사회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치, 인권, 성평등,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학교교육 등 영역별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현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자치, 인권, 평화와 통일 등 각 분야의 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기획자, 진행자, 강사, 활동가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셋째,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민주주의 학습 및 참여 모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박성호(2018). 직접민주주의로 광장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제45차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연차대회 자료집.

옥세진·전성환·박성호·조철민·이다현·임현성(2018). 세종시 민주시민교육 운영모델 연구.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우기동·이병태·조철민(2018).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운영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고사이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https://www.gill.or.kr>

대전광역시의회 <http://council.daejeon.go.kr>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https://seoulminjucenter.wixsite.com>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 하는가?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 윤 기

1. 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견해를 달리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 즉 시민성(citizenship)을 육성하는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등은 이를 시민교육(civil education), 독일은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 일본은 공민교육(公民教育)이라는 개념으로 국가마다 조금씩 달리 사용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시민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가치와 지식,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민주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정치 이념이자 제도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두 번의 쿠데타와 종신집권 시도, 세 번의 국회 강제 해산, 아홉 번의 헌법 개정 등을 거친 투쟁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서구에 비해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수백 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확립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일거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국민이 이끌어낸 직선제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에 진입한 후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민주화란 어느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점점 개인화되고 정치에 무관심해져 가는 현대사회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진전된 모습은 아마도 더불어 사는 사회, 풀뿌리 민주주의(시민 참여) 실현일 것이다. 이는 이미 확립된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 시민사회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채 절차적 민주주의만 갖춘 사회는 절반의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급격히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민주시민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참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체득하지 못하고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인지해온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려 그들을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 민주시민교육의 경험¹⁾

1.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은 새로운 독립국가 시민 육성을 목표로 1946년 공민, 지리, 역사, 직업을 총괄하는 미국의 중등교과서를 본뜬 ‘사회생활과’를 도입했다. 당시의 교육 목표는 명목상 미국식 민주주의를 염두에 둔 민주시민교육이었으나, 사실상 민주주의 보다는 민족주의 혹은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국민교육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5년 8월 제정된 제1차 교육과정에서도 사회과 교육은 반공과 반일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제2차 교육과정(1963-1971)과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을 이어 오는 동안에도 반공 안보교육과 주체성 교육, 새마을 교육 등 국가 중심의 국민교육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제5공화국 당시의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시민교육에 대한 시도였으나, 권위주의 국가의 영향력에 따라 비민주적인 정치제도와 정치행위에 대한 정당화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시민교육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제5차(1987-1992), 제6차(1992-1997)을 거치면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국민적 자질 개발에서 시민적 자질로 변화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절차 및 과정, 질서의식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함양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한국적 가치와 국제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공동체 책임의식 함양, 민주시민 기본역량 및 기반 조성, 민주시민교육 체제 구축을 중심과제로 선정하였다. 2013년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해 민주시민교육을 선도했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를 개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4일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독립 교과목 개설까지 검토하고 있다.

1) 교육부(2015).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2. 서구의 민주시민교육 경험

미국은 다양한 이주민들의 통합을 위해 민주주의 이념과 미국적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 향상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공교육기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장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가 ‘국가표준지침서’와 ‘국가교육향상평가서’등 시민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관심사가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변화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이 교육의 주된 관심사는 미국 인구구성의 다양성과 다문화 교육이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시민의 관심과 능력을 정치적 관계에 맞추도록 유도하고, 정치적 지식과 통찰력을 확대시키고, 판단능력 향상을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민주 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민주시민교육이 하나의 교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학년에서 11학년 사이에 주 1~2시간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외에도 취학 전, 학교 외 청소년, 성인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연방정치교육원, 주 정치교육원, 시민대학, 각 정당의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1915년 사회과(social studies)교과로 시작된 영국의 민주시민교육은 1990년대 이후 공동체 생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청소년들의 무관심을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민주시민 교육의 기초가 된 1998년의 크릭 보고서(The crick report)는 시민성 교육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국가의 정치의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고, 시민을 공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준비시키고, 젊은이들이 공동체와 공적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89년 인권선언에 연원을 두고 있는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 스스로가 합리적 비판의식을 지니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자유와 평등을 중심 가치로 타인에 대해 자신이 누리는 것과 자유와 권리를 상대방에게 보장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 가치를 인식하고 서로 다름에 대해 이해하는 관용(Tolerance)의 가치추구가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주요 내용, 의미, 의의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총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단체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이 담겨져 있다.

1.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적용 대상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이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시에서 시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단체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치구와 민간의 관련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지도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서울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자치구 안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단체장에게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자각시키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첫째, 해당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둘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3.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에게 민주주의 원리와 이념을 습득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례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민주주의 이해 및 정치 참여 교육, ▶역사·문화, 사회통합 교육 ▶민주시민의 역량과 자질 함양 교육, ▶공유 가치 등에 관한 교육을 담았다. 여기서 민주시민의 자질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자율과 책임 등을 포함한다.²⁾

이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역할 학습 및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비롯하여, 개인적·시민사회적·민주주의적 차원에서의 실천을 통하여 공동체 책임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선거연수원(2014), 민주시민 교육의 이해, p.4.

4.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는 단체장에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민주시민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5. 민주시민교육 위탁

조례는 보다 전문적인 민주시민교육 시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치 이념이나 시대상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성격상 자칫 정치 이념을 주입시키거나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직접 교육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독립된 기관이나 관련 전문민간단체의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6.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이수 · 관리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상황에서, 교육에 참가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조례에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자치구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주민의견을 수렴·조정하는 하부 행정단위 주민 대표들의 민주시민교육 이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의 교육 참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조례 제정 이후의 성과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조례가 제정되고 1년 후인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연도별로 사업을 늘려갔다.

서울시는 민간단체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있다(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지원). 공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은 강사료·교재비·재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형성·활동할 수 있도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다(시민사회참여모임 지원). 이 사업을 통하여 전문가와 동아리 간 만남을 주선하고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한편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2016년까지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2017년부터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추진 중이다.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단체는 2년 동안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관련 사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확산한다는 취지이다.

<표-1> 2015~2018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운영

		민주시민교육자문위 원회 구성·운영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회참여모임 지원	민주시민포럼 워크숍 운영	기타
2015년	서울시 직영		14개 사업	-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
2016년			41개 사업 -일반(21개) -특화(10개) -실태조사(4개) -콘텐츠개발(6개) *예산 : 300백만원	71개 동아리 -지역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모임 등 *예산 : 71백만원	10회 개최	생활 속 민주주의 UCC 공모전 개최
2017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단체 위탁	-15명 이내(시의원, 시민단체, 학계, 관계공무원 등) -2년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양한 자문	39개 사업 -주제별(21개) -대상맞춤형(8개) -사업참여촉진(10개) *예산 : 210백만원	76개 동아리 -학습(61개) -사회참여(12개) -단체연계형(3개) *예산 : 90백만원	-민주시민교육포럼 (4회) -시민정책가 워크숍 (8회)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도 제작 -BI개발, 민주시민교육 홍보영상 제작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공유대회 개최
2018년			37개 사업 -생활 속 숨은 권리 찾기(1개) -참여민주주의 활성화(10개)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만들기(9개) -자유주제(17개) *예산 : 175백만원	89개 동아리 -생활 속 숨은 권리 찾기(5개) -참여민주주의 활성화(20개)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 만들기(19개) -자유주제(45개) *예산 : 89백만원	-민주시민교육포럼 (3회) -시민정책가 워크숍 (7회)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공유대회 개최

V.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의 필요성 대두 :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

민주시민은 처음부터 그 정체성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 외에,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필요한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과 배려, 대화와 토론, 타협과 조정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습득하는 데에도 그 의의를 가진다.³⁾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시기의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유아기부터 정규학교교육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어 노년에 이르러서까지 지속적인 관련 학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시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⁴⁾ 우리는 여기서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비정파적·초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향이 바뀌거나 특정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⁵⁾ 현재 서울시의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는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위탁 단체의 결정권이 거의 없다. 따라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를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VI.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의미, 의의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네 가지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도록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성격 명확화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그 목적을 서울시민의 민주시민의식 강화를 통한 건강한 정치생활 실현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세계화에 발맞춰 민주시민교육이 헌법상 주권자이자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을 돕는 모든 과정인 것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기존의 ‘거주하는’ 시민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모든 시민으로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였다. 무엇보다 민주시

3) 위의 자료, pp.1-2.

4) 위의 자료, p.4.

5) 위의 자료, p.3.

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교화와 주입 금지 원칙, 논쟁성 재현 원칙, 학습자 이해상관성 원칙, 공적 연대 원칙 등을 보강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비편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2. 공공기관 근무 임직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의무화 등

단체장은 공무원과 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6시간 이상의 민주주의 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민주시민성 함양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구의 통·반장 및 주민자치회 위원 등에게는 민주시민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3.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 시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 시 민주시민교육 전문가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협치’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함이다.

4. 서울시 산하의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개정안은 단체장에게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서울시 법인 민주시민교육원(이하“교육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원의 기능,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임원 구성 방법 및 직무,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 총당과 운영 재원, 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 교육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사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이사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서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원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원장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대한 정치적 비편향성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원이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실행의 책임기관임을 명시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였다.

Ⅶ.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관련 법적 논란

1.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넘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서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령의 근거(위임)가 없어 위법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으나, 민주시민교육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시민에게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2. 시의 출연금으로 교육원을 설치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출연금으로 교육원을 설치하는 문제가 단체장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인 출연기관 설립권한을 사전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법의 취지에 적합하고 민주시민교육 사무가 자치사무의 범주에 속해 기관설립의 타당성도 인정되는 만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행기관과의 사전 의견 조율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3. 교육원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

출연기관의 이사에 대해 지방의회가 추천권을 갖거나 지방의원이 직접 이사회 이사로 참여하는 문제, 또는 지방의회가 이사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한을 갖는 등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지방의회 권한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한은 전적으로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판례의 취지였다고 보인다. 다만,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에 대한 추천이나 이사장임명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한은 인정되도록 폭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출연기관의 임원이 되는 것은 기관 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고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VIII. 위대한 금언으로 결론을 대신하며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며, 교육은 이를 위한 산파이다.”

미국 시민교육센터 사무총장 찰스 퀴글리(Charles Quigley)

“시민은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만들어질 뿐이다.”

독일 튀빙겐대학 정치학과 한스 게오르그 벨링(Hans Georg Wehling)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는 배워야 한다.”

지정토론

- ☞ 충남민주시민교육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25
박진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 시민사회의 조례제정 내용에 대하여 27
박수정(논산YWCA사무총장)

- ☞ 경기도 사례 기반 추진체계 구축에 관해 29
이필구(경기도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장)

- ☞ 전국적 민주시민교육 전망에 대하여 35
황정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장)

충남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진용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시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교육과 공공문제에 관한 토론을 활성화하라”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을 얘기한 것이다. “이게 나라냐”며 주말마다 운집하는 100만여 군중들 속에서, 어떻게 이 에너지와 경험을 우리사회의 건강한 동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하던 때여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은 듯하다.

2017년 3월 10일, 시민들의 요구대로 탄핵은 이루어졌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90년대 말부터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생활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체와 활력을 체감할만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지만, 오늘과 같은 논의가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모색이 되리라 기대하며, 현장 활동가로서 그간의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민사회, 시민운동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매개로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은 좁은 의미에서 시민정신 또는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추구하는 교육이고, 좀 더 확대하면 시민성 함양에 기여하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을 의미한다. 기존의 사회 구조와 제도 등을 변화, 개선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적인 행동으로서 시민운동이 교육·각성·실천을 통해 작동된다 할 때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은 각성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인 동시에 각성과 실천을 한 단계 심화하는 과정으로서 기능한다.

○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공적 재원의 투입과 공공의 관계망 등을 활용해 그간 시민사회 차원 만으로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지속성, 안정성, 전문성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의

빈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충남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 사회적 실천의 연계, 서로 다른 영역과 자원을 아우르는 공공의 역할

최근의 경험을 통해 가장 인상적인 민주시민교육 공간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였다. 그런데 이들 공간의 참여와 작동방식은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평면적인 민주시민교육의 그것과 차이를 보였다. ‘무언가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식의 문제의식에서 참여가 조직되고 구체적인 필요와 목표로 인해 학습과 소통이 촉진되는 경향이 강했다. 기존 강의식, 토론식 교육방식을 넘어 사회적 이슈와 현장 참여를 통해 학습과 소통의 욕구를 높이는, 사회적 실천과 참여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운영의 입체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사회적 경제, 봉사, 사회복지 등 서로 다른 영역들을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과 제도, 담당 기관과 사업들은 제 영역별로 구분되지만 이 모두는 시민들 개개인의 삶이라는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일련의 조건이며 환경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거버넌스, 안정적인 지원과 자율성 보장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거버넌스가 확대되고 있다. 시민들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로서 머물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정책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이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정치영역과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행정영역, 운영을 책임지는 민간영역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하게 되는데 그 효율성 만큼이나 추진이 쉽지 않음을 자주 경험한다. 정치와 행정이 자신들의 권한을 이해관계에 따른 민간통제의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와 민간이 거버넌스 참여를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주체 결정이나 주도권에 대한 문제 정도로 접근하는 경우에 그렇다. 참여 주체들이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부터 이러한 역할 분담과 협업구조 등 운영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와 행정은 안정적인 기반과 지원을 보장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민간은 합리적 소통과 의사결정, 관련 자원들의 조직과 연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시민사회의 조례제정 내용에 대하여

논산YWCA
사무총장 박수정

I. 들어가며

우리 기관에서는 지난 2년간 청소년들과 함께 키다리(키우자 Y다운 리더) 민주주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미성숙한 존재로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해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무언가를 기획하고 진행해 볼 경험이 적은 이들에게 한 인간이 스스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존감을 되찾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일에 흥미가 있고 좋아하며 잘하는지, 찾아가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풀어갈 세대들을 양성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갖도록,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의 가치와 시민의식 변화를 선도하는데 교육과 실재를 바탕으로 진행한 바 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항,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우리기관에서 도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의 가치와 시민의식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하고 실천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1990년 후반부터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개하였지만 현재까지 법안이 계류 상태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법 제정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갑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충남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해 시작하는 이 자리를 매우 환영하며, 박성호·서윤기 위원장께서 발표한 내용을 공감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참여와 가치, 시민의식 변화를 충분히 끌어 올리려면 지방자치에 맞게 조례제정을 만들고 다양한 시민교육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II. 조례제정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현대사회에 있어 강한 개인주의와 사회성 약화, 사회현상과 정치에는 무관심하며, 더 불어 함께 가야 할 의제를 가지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보편적으로 자신에게 실익을 판단하여 참여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 현장에서의 경험이다.

우리 충남에서 조례제정에 무엇을 담아 낼 것인가?

앞서 두 주제발표에서 상세하게 언급한 내용을 동의하고 공감하며 토대를 삼아 상대적 가치를 인식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와 가치를 추구하여 시민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첫째.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에게 체감하는 실질적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것이 동시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셋째. 위원회를 둘 때 구성원이 한쪽으로 편향될 것을 우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을 고려하여 성인지 관점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인력풀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다른 여건, 도출 욕구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앞당기려면 민주시민교육 전문가.활동가를 교류할 수 있도록 인력풀 구축은 필수여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과 관계 기관 관계자들은 민주주의 소양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민.관.학의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갈 때 민주시민교육 추진 운영 모델(안)을 제안했듯이 지역사회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

조례는 발의한 자의 경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상징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별로 놓여져 있는 다양성을 진단하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을 발굴하여 위탁하되 위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현장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중간지원조직 수요자간의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교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마무리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지역특성으로 고려하여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지역에서는 평생교육으로 인문학강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명세를 가진 강사진 구성으로 인문학 강의가 민주시민교육으로 모호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구상을 열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나 민주시민이라는 말들이 친숙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와 지역사회에서 또는 국가를 들여다보고, 세계를 볼 수 있는 가치를 열어갈 때 커뮤니티를 통해 보편적 합의를 열어 시민들의 삶 중심이 실천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사례 기반 추진체계 구축에 관해

경기도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위원장 이 필 구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며, 교육은 이를 위한 산파 역할을 해야 한다” (존 듀이)
“시민은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만들어질 뿐이다.” (찰스 퀴글리)
“그들을 위해 외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게 하라.” (허병섭)

1. 민주주의는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시민’을 뜻하는 ‘Demo’, ‘권력’을 뜻하는 ‘Kratia’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시민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정치적인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자결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확립, 그리고 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이다. 이러한 시민의 능력은 정치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판의 능력, 그리고 정치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헌신과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의지, 그리고 시민상호간의 요구되는 시민성이 생활세계에서 작동되고 키워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살아있게 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잘 안 보이는 것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가 이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권한을 시민들이 갖는 것이다. 미국의 로체스터시의 ‘마을을 만드는 이웃들’ 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 과정도 공무원이 마을회의에서 하는 일은 장소를 잡고, 불을 켜고 끄는 역할이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주민들이 논의하다 막힐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행정 지원도 받기도 한다.

지방예산에 관심이 없다가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기획하고 돈을 써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면 힘들 수 밖에 없다. 지역과 구조를 알아야, 하고 싶은 것도 생긴다. 이해관계를 알아가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살아가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해 관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충분히 드러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함께 구상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는 자신을 민주주의자라고 하지 않고 정치주의자라고 말한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나찌즘 시대를 살면서 실제 유태인을 유럽으로 빼내는 일을 하다가 수용소에서 6개월 정도 갇혔는데 그 경험이 평생 삶을 좌우하게 됐다. 끔찍한 수용소 생활은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나 이름, 언어, 목소리, 신체와 같은 것은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는 번호로 불리며 의미 없는 존재로 취급 받았다. 그녀는 당시 수용소 생활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옆집 사람을 동료로 마주보고 살고 있나?”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민주주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화가 가능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화가 가능한 관계가 맺어지려면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하고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신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난다. 전체주의 정권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사람이 뭉칠 수 없도록 만드는 관계망, 세계망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끔찍하다. 그 결과 서로를 같은 시민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서로를 시민으로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다.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선 민주주의에 걸 맞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는 타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는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보다 구성방식이 더 중요하다. 민주적 의사소통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절차나 주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 변화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다. 아마 변화 보다는 진화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민주시민교육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시대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변화가 꾸준히 이뤄졌다. 특히 현장에 기반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상황에 맞게 여러 패턴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이름의 교육이 만들어졌고, 이를 수행하는 사회 시스템 역시 다변화 되면서 현재는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대부분의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 말하고 있다.

최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이다. 민주주의가 한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체계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고, 이런 토대를 구축하는 도구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또한 시민교육이라 하지 않고 굳이 민주시민교육이라 칭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도권내 시민교육이 국가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민교육이나 국민교육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단합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하는 체제 유지교육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민주적’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경우 2015년에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성남, 안양, 광명, 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 사업 조직, 운영에 대해 중장기 정책방향을 세우는 추세이다. 특히 작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자치, 분권, 협치 과제가 중요하게 거론되면서 그 결과 지방자치, 주민자치, 교육자치 정책과제가 보다 활발히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분권과 자치, 협치 정책의 방향에 맞춰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정치 및 시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시민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사무국을 맡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사업과 운영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에서 경기도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발전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경기교육단체연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포럼)가 합의해 경기민주시민교육센터내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평생교육진흥원과 민관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추진체계와 과제

1) 경기 민주시민교육 사업추진 방향

가. 교류, 협력, 민주시민교육의 저수지 필요

- 경기도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운동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 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는 각 지역별 활동가를 모으는 저수지 역할이 필요함. 이를 위한 연간 사업 기획 필요하다는데 민주시민교육진영 및 시민사회단체가 합의하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나. 경기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방향 모색

- 현재민주시민교육은 이현령비현령의 상황임. 민주시민교육의 정답이 있을 순 없지만, 경기도형 보이텔스바흐협약 같은 기준과 원칙은 필요함.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되더라도, 의견을 모으고 합의하는 장은 상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경기도내 다양한 주체들을 모아 민주시민교육 포럼 및 토론회, 원탁회의 등 공론장 형성 사업을 기획함.

다. 추진 주체가 분명해야 함

-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주체는 행정으로 보면, 경기도와 평생교육진흥원이지만 시민 사회 주체는 각 운동영역이 되어야 함. 현재 자문위 구성 등 사업 추진 주체들이 시민사회와 협업구조를 띄고 있지 못함. 이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되고 있음.
- 이를 위해 독립된 경기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또는 민주시민교육원 설치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추진 방식은 여전히 이견이 있음. 현재는 협의 과정이 필요함.

라. 광역과 기초의 역할에 관한 고민 필요

- 도의 역할은 직접 사업을 줄이고,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예로 경기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협의체)가 바로 서고, 지역별 사업을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2) 2018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업

사업명	프로그램
실천과 참여형 도민 공모 지원 사업	분야별 학습프로그램 지원 확대 운영
	지역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거점 지원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및 활동가 역량 강화 연수
민주시민교육 조사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시범 사업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정책 수립 기초 조사 및 연구
	민주시민교육 우수 사례 공모
	민주시민교육 사업 운영 성과 및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요 파악
	민주시민교육 전문가(관계자) 및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민주시민교육 도민 참여 및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포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토론회(토크콘서트)
	500인 원탁토론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및 지역 공론장 구성 : 민주시민교육지역협의체 구축사업 :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포럼 및 워크숍 : 누구나 토크, 누구나 교육감 시민정책공론장 사업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경기도 주민참여회의 : 일상의 민주주의 찾기(마을민주주의 과제) : 동네안에 국가가 있다. (자치, 협치 교육 - 주민자치교육) 3천5백 : “지방자치의 꽃 경기도의회를 교육의 장으로” 시범사업

3) 과제

가. 자치, 분권, 협치 시대를 여는 민주시민교육의 지역화 전략 필요

- 최근 민주시민교육이 전국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고 일상의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이유는 416이후,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 욕구와 이해가 다변화 되면서 지역에 기반 한 시민정치, 시민자치 운동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임.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역시 국가 및 사회운영 시스템을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체계를 구상하고 실현시키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짐.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과 과제는 과거에 비해 보다 명확해 지고 있음. 일상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생활공간에서 자치와 협동의 원리로 운영되는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융합적 상상력과 새로운 방식의 실천이 버무려 질 때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음. 일상의 민주주의는 마을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작동될 수 있음. ‘자치’ ‘협치’ 이를 위한 혁신의 과제를 영역을 넘어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임.

나. 독립된 민주시민교육 지원 중간지원기구 설치

- 모든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내실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행정력을 지닌 독립된 중간지원기구의 설치가 요구됨.
- 일찍이 공공정책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해 온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은 해외사례에서도 중간지원기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중간지원기구의 모델은 기존에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에 기반 해 추진되고 있는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사회혁신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다양한 지원센터들을 참조할 수 있음.
- 중간지원기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민 주체와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학교와 마을, 지역 전체를 시민교육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활동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다. 교육자치 시대, 학교 교육과정 및 평생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실시

-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6가지 영역 중 하나로 ‘시민참여교육’을 명시하고 있음.⁶⁾
- 하지만 입시와 경쟁중심의 학교교육과 취미와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속에 민주시민교육은 도외시 돼 온 것이 현실임.
- 향후 학교 현장에 맞는 민주시민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돼야 함.

6) 스웨덴성인교육협회(ABF) 대표 키스티 졸마(Kirsti Jolma)씨에 따르면 ABF는 105년 역사를 가진 최대 규모의 교육단체인데 그 지부가 스웨덴 대부분의 지역에 결성되어 있으며 68개의 회원 단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관의 목표가 인상적이었다. 첫째가 “민주주의를 발전 강화 시킨다”는 것이다.

